

□ 40개 행정기관내 지정된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현실과 과제

장기 정책조율 취지 살릴 구체적 활용방안 필요

전담요원 소극적 업무계획 없는곳 많아 형식화 우려

김미경 기자

40개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안에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협조 전담하는 부서가 확정됐다.

정무장관(제2)실은 20일 경제기획원 국민생활국 복지생활과,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 문화체육부 생활문화국 생활문화과, 법제처 행정관리담당관실, 대검찰청 기획과, 병무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등 행정기관 40개 부서를 '여성정책 전담부서'로 지정해 발표했다.

부처별 여성정책 추진계획 수립과 관계부처간 여성정책 협조 업무를 전담할 여성정책 전담부서 지정은 그동안 특정한 여성관련

사안이 있을 때만 관련 부처에서 그때그때 협조체제를 갖추던 데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한 부서에서 여성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성정책 발전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무장관(제2)실 조우철 제1조정관은 "그동안 각 부처 여성정책 종합조정기구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열두번 열렸지만 부처별로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없어 각 부처의 여성정책 의견이 제대로 수렴·반영되지 못했다"며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잘 활용하면 전부처 여성정책을 종합조정하는 데 큰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계획과 실적은 해마다 3월31일까지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통해 정무장관(제2)실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전담부서 지정은 여성정책에 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참신한 여성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 미비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즉 여성정책 전담부서 지정이 단순히 지정을 위한 지정에 그쳐 구체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그 첫째다.

이번에 지정된 여성정책 전담부

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각 부처 행정관리담당관실이 19곳, 기획과가 7곳, 공보관실·관리과 등이 각각 1곳으로 여성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기획하거나 추진해 나갈 부서로는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전담부서로 지정된 부서들도 "지정만 됐을 뿐 특별히 업무 추진 계획을 잡아놓진 않았다"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다.

경찰청의 경우 기획관리관실로 전담부서가 지정됐지만 정작 기획관리관실에서는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대검찰청 기획과의 경우 "소년선도위원 위촉 때 여성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키라"는 정도의 주문으로 지정을 받아

들고 있다.

정보분석실 제3분석관실로 전담부서가 지정된 통일원도 "북한 사회문화 속에 여성이 포함돼 지정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은 여성정책 전담부서로 지정된다고 따로 여성정책을 연구할 전담요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 담당 공무원들이 '괜히 일만 하나 더 많아졌다'는 식으로 지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데서 나온 결과다.

또한 정무장관(제2)실이 지정만 했을 뿐 부처별로 어떤 여성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행정기관 각 부처에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지정돼 여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무장관(제2)실에 설치된 '평등의 소리' (725-0505) 모습.

시의적절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새로 도입된 각 부처 여성정책 전담부서 지정 제도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무장관(제2)실이 더 적극적으로 각 부처 관련 여성정책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